기획예산처	보도설명자료	대체불가 대한민국

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배포 2026. 11. 6.(금)

기획예산처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국회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있으며, 내실 있게 설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
< 보도내용 >

□ 2026.11.6.(금) 주간경향은 「미래대응 아닌 미래소멸기금? 162조원 기금 논란 확인해보니」 기사에서 미래대응기금을 비판한 커뮤니티 글을 인용하면서

○ “미래대응기금이 실제로 미래 투자와 재정 안정화에 기여할지는 앞으로의 운용 결과를 통해 평가해야 한다. 정부안이 국회의 재정 통제권을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는 이미 국회 내부의 공식 검토와 전문가 분석에서도 제기됐다.”

○ “현재 미래대응기금 설치법과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국회 심사 단계에 있다. 기금 신설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162.3조원의 운용 방식이 최종 결정된 것도 아니다. 온라인 글이 지목한 네 사람을 ‘4적’으로 단정할 근거는 부족하다. 법률안에 포함된 국회 사전심사 예외를 어느 범위까지 허용할 것인지는 여전히 국회가 결정해야 할 문제다.”라고 보도하였습니다.

< 정부입장 >

□ 주간경향이 同 기사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인용한 커뮤니티 글은 미래대응기금 관련 정부 인사들의 발언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있습니다.

□ 첫째, 미래대응기금은 기획예산처의 권한 강화를 목적으로 만든 기금이 아닙니다.

○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이례적인 세수 증가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정부·학계 내 다양한 논의가 있었으며,

○ AI 대전환을 위한 전략적 투자와 세수 변동성 흡수·완화를 위한 재정 안정화 장치 마련 등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.

□ 둘째, 미래대응기금도 다른 회계·기금과 마찬가지로 국가재정법과 국회법의 규율과 통제하에 관리·운용될 것입니다.

○ 미래대응기금의 관리·운용상 필요한 규정들은 국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법률로써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.

□ 미래대응기금 관련 공청회·토론회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있으며, 국회 논의과정에서 제안해 주신 사항들도 경청하고 있습니다. 제도의 내실있는 설계를 위해 합리적인 제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.

○ 아울러, 건설적인 제안·비판이 아닌 악의적이고 근거없는 억측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·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.

담당 부서	미래전략기획실 미래대응기금 추진단	책임자 담당자	단 장 박성훈 (044-214-2360) 서기관 박성준 (bbakko0@korea.kr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
대체불가 대한민국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